
주요국 예산안 - 일본

2019. 1.

연구책임자

박한준 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광남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예산기조	6
3. 예산안 내용	9
가. 세입	9
나. 세출	12
4. 주요 재정정책	19
가. 경제성장	19
나. 안전·재해 예방	20
다. 지역발전·창생	21
라. 재정건전화	22

일본 개황

☐ FY2019: 2019.4 ~ 2020.3

☐ FY2019 예산편성 일지

- 2018.7.10. FY2019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 발표
- 2018.9.7. FY2019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
- 2018.11.20. FY2019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의 발표
- 2018.12.7. FY2019 예산편성 기본방침 발표
- 2018.12.21. FY2019 예산 정부안 각의결정

☐ 출처

- 平成30年度補正予算(第1号) (2018.10.15.)
- 平成31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8.12.7)
-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 平成30年度補正予算(第2号) (2018.12.21.)
- 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 平成31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8.12.21.)
-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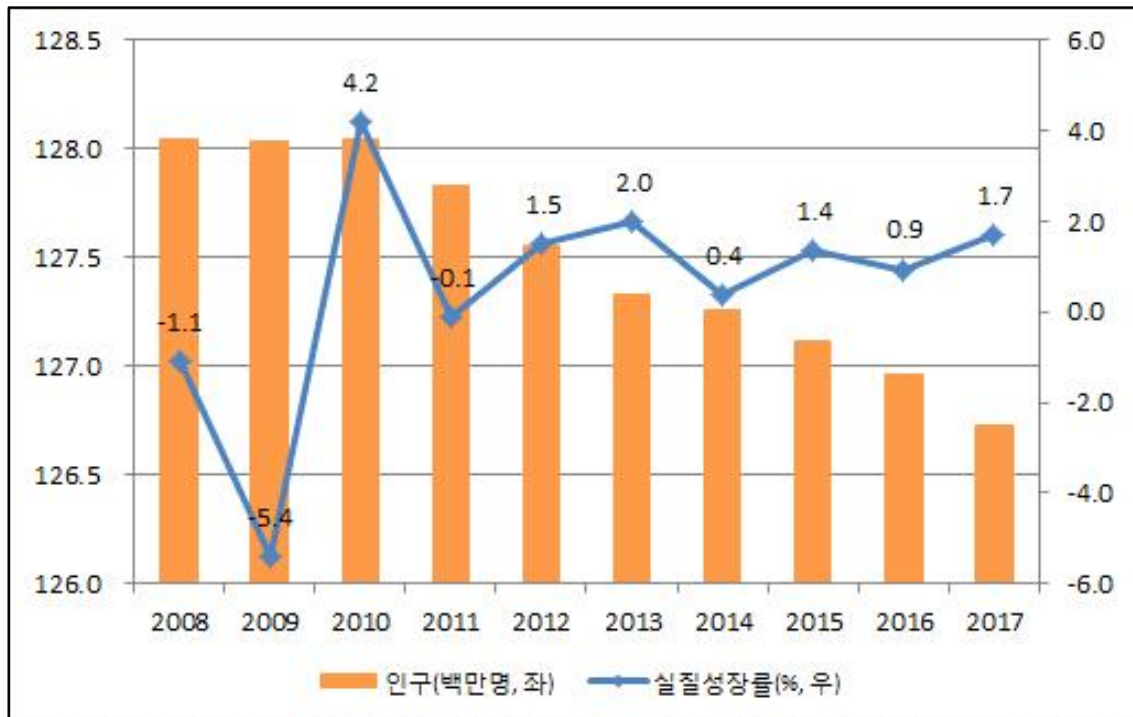
☐ 환율: 100엔 = 약 1,008.52원 (2017년도 평균)_OECD stat

☐ 경제규모: 2017년 경상GDP 5조 3,334억 달러 추정(우리나라 약 2.7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7년 기준 34.4%(우리나라 80.8%, 2017년 기준)

□ 인구: 1억 2,673만명 (2017년 기준)

□ GDP 및 인구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9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9.4% 감소한 8.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예산기조

- 「신경제·재정재생계획」 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減災)·국토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둠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59조 9,352억엔을 편성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임시특별조치로 2조 280억엔을 추가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 관광 콘텐츠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사회보장관계 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 대폭 감축 및 세출 개혁 노력 지속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총평) 2019년도에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¹⁾에 대응하여, 당초 예산에서 계획한 임시특별조치 강구 등 「2019년도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 상의 정책¹⁾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성장률) 2019년도 실질GDP성장률은 1.3%, 명목GDP성장률은 2.4%로 전망
 - 정책 효과와 더불어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을 이어가는 경제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과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2% 증가 전망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환경과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로 전년대비 1.3% 증가 전망
 - (민간기업설비투자) 견조한 기업 이익과 일손 부족 대응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2.7% 증가 전망
 - (공적수요) 사회보장관계비 및 방재·감재(減災), 국토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에 따른 공공사업 관계비의 증가로 인해,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공적수요의 기여도가 전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
 - (해외수요) 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국내 수요를 반영하여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보합 전망(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해외수요의 기여도 전년 대비 △0.0% 전망)

1) ①지속적인 성장 경로의 실현을 위한 잠재 성장률 향상을 위해 “인재육성혁명”과 “생산성혁명”을 최우선적 추진, ②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희망출산율 1.8 달성, 개호이직 제로 달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 지속, ③지방창생·국토 강인화·여성과 장애인의 활약·외국인력 수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세율 인상 전후 수요 변동이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일본 내각부,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 (노동·고용) 고용환경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및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자수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6,006만명으로 전망되며, 완전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2.3%로 전망
- (광공업 생산) 국내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물가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급을 견인하며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점차 탈피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지수는 1.1%, GDP디플레이터 역시 1.1% 상승 전망
- (국제수지) 해외에서의 소득 증가 등으로 경상 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가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7		2018		2019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조엔)		547.4	552.5	566.1	2.0	1.9	0.9	0.9	2.4	1.3
	민간최종소비지출	303.2	306.6	313.4	1.4	1.0	1.1	0.7	2.2	1.2
	민간주택투자	17.2	16.7	17.3	1.1	△0.7	△2.8	△4.2	3.3	1.3
	민간기업설비투자	86.2	90.2	93.1	5.4	4.6	4.7	3.6	3.2	2.7
	민간재고품증가(기여도) ^주	0.7	1.0	0.9	(0.1)	(0.1)	(0.1)	(0.0)	(△00)	(△00)
	재화·서비스수출	98.2	102.5	107.4	10.5	6.4	4.4	2.7	4.8	3.0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93.3	100.7	104.7	11.7	4.1	7.9	2.8	4.0	3.3
	내수기여도				2.1	1.4	1.5	0.9	2.3	1.4
	민간수요기여도				1.7	1.3	1.3	0.9	1.8	1.1
	공적수요기여도				0.4	0.1	0.2	0.0	0.5	0.2
	외수기여도				△0.1	0.4	△0.6	0.0	0.2	△0.0
국민총소득(GNI)		567.3	573.3	587.8	2.2	1.6	1.1	0.5	2.5	1.6
노동·고용 (만명)										
	노동력인구	6,750	6,831	6,871	1.0		1.2		0.6	
	취업자수	6,566	6,665	6,711	1.4		1.5		0.7	
	고용자수	5,848	5,950	6,006	1.5		1.7		0.9	
	완전실업률 (%)	2.7	2.4	2.3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2.9	1.4	2.4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율)	2.7	2.7	2.0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7	1.0	1.1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1	0.0	1.1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4.1	1.0	2.0						
	무역수지	4.6	1.5	1.0						
	수출	78.3	83.0	86.4	10.6		6.0		4.1	
	수입	73.7	81.5	85.4	13.4		10.6		4.8	
	경상수지	21.8	20.4	22.3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	4.0	3.7	3.9						

주: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자료: 내각부,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9.4% 감소한 8.4조 엔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19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5.8% 증가한 62.5조엔, GDP 대비 비중은 11.0%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대비 0.3%p 상승한 11.9%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4조엔 (GDP 대비 17.6%)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75.9조엔(GDP 대비 13.4%)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0.9%p 감소한 158.4%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대비 약 2%p 감소한 198% 규모로 전망

<표 2> FY2019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정부안)
일반세출 ²⁾	54.0	56.5	57.4	57.8	58.4	58.9	59.9 (62.0)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70.4	72.6	72.9	73.1	73.9	74.4	75.9
GDP 대비 %	13.9	14.0	13.7	13.6	13.5	13.5	13.4
일반회계세출총액	92.6	95.9	96.3	96.7	97.5	97.7	99.4
GDP 대비 %	18.3	18.5	18.1	18.0	17.8	17.7	17.6
조세 및 인지수입 ⁴⁾	43.1	50.0 (4.5)	54.5 (6.2)	57.6 (6.3)	57.7 (6.3)	59.1 (6.4)	62.5 (7.9)
GDP 대비 %	8.5	9.6	10.2	10.7	10.5	10.7	11.0
국채발행 수입	42.9	41.3	36.9	34.4	34.4	33.7	31.9 (32.7)
국채잔고	743.9	774.1	805.4	830.6	853.2	880.2	896.7
GDP 대비 %	146.6	149.4	151.1	154.7	155.9	159.3	158.4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971.8	1,000.6	1,032.7	1,056.1	1,076.6	1,104.6	1,122.0
GDP 대비 %	192	193	194	197	197	200	198
기초재정수지 ⁵⁾	-23.2	-18.0	-13.4	-10.8	-10.8	-10.4	-8.4 (-9.2)
국채의존도(%) ⁶⁾	46.3	43.0	38.3	35.6	35.3	34.5	32.1 (32.2)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팔호안 이텔릭체의 수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5)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2. 예산기조

□ FY2019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18.12.7.)²⁾

- 2019년 예산편성은 구조개혁을 지속함과 동시에, 금융정책과 성장 지향적인 재정정책의 적절한 결합을 추진
 - 재정건전화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한편, 유아 교육 무상화, ‘인재육성혁명’ 추진, 제4차 산업 혁명 대비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연구 개발 혁신 촉진 등 중요 정책 과제 지원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울러 연말에는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기로 함
- 2019년 10월 1일에 예정되어있는 소비 세율 인상에 대응하여,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
 - 또한 경제의 회복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2019·2020년도 기존 예산에 임시 특별 조치를 강구
- 중요인프라 긴급 점검 결과를 근거로 방재·감재(減災) 및 국토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3년간 집중적으로 실시
 - 이 가운데 첫 번째 해에 신속하게 착수해야하는 것은 이번 제2차 추경예산으로 대응하고, 이외의 것은 2019·2020년도 기존 예산의 임시 특별 조치를 활용하기로 함
- 이번 2019년 예산을 새로운 경제·재정 재생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보장개혁과 기반 강화를 꾀하는 첫 해 예산으로 삼고, 사회보장관계비와 비사회보장관계비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개혁 노력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함
 - 현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 전반에 걸쳐 성역 없는 철저한 검토를 계속 추진하고, 지방에서도 국가의 노력과 기조에 맞게 철저한 검토를

2) 내각부, 「平成31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8.12.7.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8/31_yosanhensei.pdf

진행

- PDCA 사이클³⁾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세출 분야에 걸쳐 행정사업리뷰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근거기반정책입안(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추진하여 예산의 질 향상 및 효과 검증을 꾀함
 - 또한 행정 절차 전자화로 행정 절차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공공조달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PPP/PFI⁴⁾와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 위탁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이러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검토
 - 세출 효율화 및 경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전략적으로 전국으로 전개를 진행하며, 대응 상황의 지역 차이를 가시화하여 개혁 노력의 목표로 활용

□ FY2019 예산의 주요 내용 (2018.12.21.)⁵⁾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경제·재정재생계획」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국토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사회보장강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세증액분을 활용하여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사회 보장에 충실(총 8,110억엔 추가 투입)
 - 유아교육·보육 무상화(2019년 10월~)에 3,882억엔 추가 투입
 - 간호인력 처우 개선(2019년 10월~)에 421억엔 추가 투입
 - 연금생활자지원급부금 지급에 1,859억엔 추가 투입
 - 저소득고령자의 개호보험료 부담 경감에 654억엔 추가 투입 등

3)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은 Plan(정책기획입안, 성과목표 설정)→Do(정책시행)→Check(행정사업 리뷰·정책평가)→Action(예산요구)을 의미

4) PPP는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FI는 민간투자개발사업 (Private Finance Initiative)임

5)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를 정리하여 작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9/seifuan31/01.pdf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 (총 2조 280억엔 투입)
 -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매장에서 카드 결제 등 무현금 거래 수단을 사용(캐쉬리스 결제)한 경우, 소비세율 인상분만큼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 2,798억엔 책정
 - 저소득·자녀양육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상품권 지급에 1,723억엔 책정
 - 주택 매입자 등 지원에 총 2,085억엔 책정(주거급여금 785억엔, 차세대주택 포인트제도에 1,300억엔)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대책에 1조 3,475억엔 등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따라 긴급 대책 160개 항목을 2020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2019·2020년도 임시특별조치를 활용(2020년도까지 3년간 사업 규모는 약 7조엔 정도)
- (재정건전화) 「신경제·재정재생계획」 하에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함
 - 사회보장관계비 : 고령화에 기인한 증가분만 반영하는 방침 달성을 통해 증가액을 4,768억엔으로 억제
 - 비사회보장관계비: 세출개혁 노력 지속으로 330억엔 확보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국채발행액을 7년 연속 감축
 - 2018년도 33.7조엔→2019년도 32.7조엔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 2018년도 - 10.4조엔→2019년도 - 9.2조엔

<참고 1> 2019년도 10월 1일 예정, 소비세율 인상 개요와 대응

□ 소비세율 인상 개요와 기본 개념⁶⁾

- (인상률) 2019년 10월 1일 현 8%의 소비세율이 10%로 2%p 인상됨
- (대응 원칙) 지난 3%p 인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현 경제의 회복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
 - 임시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2019년·2020년도 예산을 통해 각 조치의 규모와 실시시기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전체적인 재정 균율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함
 - 각 조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함
 - 미래와 경제 구조 개혁에 이바지하는 관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
-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그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홍보를 실시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⁷⁾

-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 5.2조엔 정도로 예측됨
 - 국가·지자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5.7조엔)+지난해 실시한 담배세와 소득세 재검토 등에 의한 재원확보의 영향(0.6조엔)－경감세율제도의 실시에 따른 영향 억제(1.1조엔)
- 이 가운데 유아교육 무상화 등의 조치로 그 영향은 2조엔 정도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2.3조엔(임시특별조치 2조엔+제도상 지원 0.3조엔) 가량의 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악영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6)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7)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9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으로 전망되며, 기타수입 및 국채발행액을 통해 추가 조달되는 임시특별조치분 2조 280억엔을 포함한 총세입은 101조 4,564억엔임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1.0%로 전망
 - 원천소득세(5.6%), 신고소득세(0.9%), 법인세(5.7%), 소비세(10.4%), 담배세(1.7%), 관세(1.2%)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상속세(-0.4%), 주세(-3.1%), 자동차중량세(-4.8%), 휘발유세(-1.2%) 등이 감소⁸⁾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5조 566억엔으로 전망
 - 임시특별조치분(1조 2,461억엔)을 포함할 경우, 전년대비 27.5% 증가한 6조 3,016억엔임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31조 8,779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임시특별조치분(7,819억엔)을 포함할 경우, 감소폭이 일부 상쇄되어 전년대비 3.1% 감소한 32조 6,598억엔임

8) 재무성, 「平成31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18.12.21.

<표 3> FY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억엔, %)

구 분		FY2018 당초(A)	FY2019 정부안(B) ¹⁾		증감액 (B-A)	증감율 (B/A-1)
				임시특별 ²⁾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90,790	624,950	624,950	34,160	5.8
	2. 기타 수입	49,416	50,556	63,016	1,140	2.3
	3. 국채발행액	336,922	318,779	326,598	△18,143	△5.4
	(1) 공채금(건설국채)	60,940	61,701	69,520	761	1.2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75,982	257,078	257,078	△18,904	△6.8
	합계³⁾	977,128	994,285	1,014,564	17,157	1.8
세 출	1. 국채비 ⁴⁾	233,020	235,082	235,082	2,062	1.2
	2.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44,108	759,203	779,482	15,095	2.0
	(1) 일반세출	588,958	599,352	619,632	10,394	1.8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39,907	340,587	10,025	3.0
	사회보장관계비 외	259,076	259,445	279,045	369	0.1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⁵⁾	155,150	159,850	159,850	4,701	3.0
	합계³⁾	977,128	994,285	1,014,564	17,157	1.8

주: 1) 일반회계 통상분만 산출시

2) 일반회계 통상분+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분 2조 280억엔 포함 산출시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국채비는 국채의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로, 국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비

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표 4> FY2019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8		FY2019	전년대비			
	(당초)예산	보정후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보정후예산대비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57,250	161,800	166,100	8,850	5.6	4,300	2.7
신고소득세	32,950	32,950	33,240	290	0.9	290	0.9
(소득세 계)	(190,200)	(194,750)	(199,340)	(9,140)	(4.8)	(4,590)	(2.4)
법인세	121,670	122,960	128,580	6,910	5.7	5,620	4.6
상속세	22,400	22,400	22,320	-80	-0.4	-80	-0.4
소비세	175,580	178,230	193,920	18,340	10.4	15,690	8.8
주 세	13,110	13,110	12,710	-400	-3.1	-400	-3.1
담배세	8,740	8,740	8,890	150	1.7	150	1.7
취발유세	23,300	23,300	23,030	-270	-1.2	-270	-1.2
석유가스세	80	80	70	-10	-12.5	-10	-12.5
항공기연료세	520	520	520	0	0.0	0	0.0
석유석탄세	7,090	7,090	7,070	-20	-0.3	-20	-0.3
전원개발촉진세	3,230	3,230	3,300	70	2.2	70	2.2
자동차중량세	3,950	3,950	3,760	-190	-4.8	-190	-4.8
국제관광여객세	60	60	500	440	733.3	440	733.3
관 세	10,220	10,220	10,340	120	1.2	120	1.2
톤 세 ¹⁾	100	100	110	10	10.0	10	10.0
인지수입	10,540	10,540	10,490	-50	-0.5	-50	-0.5
합 계	590,790	599,280	624,950	34,160	5.8	25,670	4.3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8.12.21.

나. 세출

□ FY2019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으로 책정되었음

- (임시특별조치) 여기에 임시특별조치로 추가로 편성된 일반세출 2조 280억엔을 더할 경우,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1조 4,564억엔임
- (국채비) 채권 잔액의 누증(累増)에 따른 채무상환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한 23조 5,082억엔을 편성
- (일반세출) 전년대비 1.8% 증가한 59조 9,352억엔을 편성되었으며, 임시특별조치로 추가 편성된 2조 280억엔을 더할 경우 편성액은 61조 9,632억엔임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대비 3.0% 증가한 15조 9,850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국세 증가 등을 반영하며,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2018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

□ FY2019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4.2%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1조 25억엔(3.0%) 증가한 33조 9,907억엔 규모
 - 또한 임시특별조치로 679억엔이 사회보장관계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1조 704억엔(3.2%) 증가한 34조 587억엔임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6.1%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807억엔(1.3%) 증가한 6조 596억엔 규모
 - 여기에 임시특별조치로 8,503억엔이 공공사업관계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9,130억엔(15.6%) 증가한 6조 9,099억엔임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4%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311억엔(0.6%) 증가한 5조 3,824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

홍비는 전년대비 204억엔(1.5%) 증가한 1조 3,378억엔 규모

- 더하여 임시특별조치로 2,201억엔이 문교 및 과학진흥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2,513억엔(4.7%) 증가한 5조 6,025억엔임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2%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대비 155억엔(0.3%) 증가한 5조 2,066억엔 규모
- 중기방위대상경비를 682억엔 증액한 반면, 정부 전용기 관련 경비에서 250억엔 감액,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미군재편경비에서 277억엔 각각 감액함
- 더하여 임시특별조치로 508억엔을 방위관계비로 추가 편성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663억엔(1.3%) 증가한 5조 2,574억엔임

<표 5> FY2019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제외)

(단위: 억엔, %)

구분	FY2018 ¹⁾	FY2019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3,020	235,082	2,062	0.9
일반세출 ²⁾	588,958	599,352	10,394	1.8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39,907	10,025	3.0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12	53,824	311	0.6
(과학기술진흥비)	(13,175)	(13,378)	(204)	(1.5)
연금관계비	2,504	2,097	△407	△16.3
방위관계비	51,911	52,066	155	0.3
공공사업관계비	59,789	60,596	807	1.3
경제협력비	5,089	5,021	△68	△1.3
중소기업대책비	1,771	1,740	△31	△1.8
에너지대책비	9,186	9,104	△82	△0.9
식품안정공급관계비	9,924	9,816	△108	△1.1
기타 경비	61,888	60,181	△1,707	△2.8
예비비	3,500	5,000	1,500	42.9
지방교부세교부금	155,150	159,850	4,701	3.0
합계 ³⁾	977,128	994,285	17,157	1.8

주: 1)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과의 비교를 위해 재조합하였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표 6> FY2019 주요 분야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포함)

(단위: 억엔, %)

구분	FY2018 ¹⁾	FY2019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3,020	235,082	2,062	0.9
일반세출 ²⁾	588,958	619,632	30,674	5.2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40,587	10,704	3.2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12	56,025	2,513	4.7
(과학기술진흥비)	(13,175)	(13,597)	(423)	(3.2)
연금관계비	2,504	2,097	△407	△16.3
방위관계비	51,911	52,574	663	1.3
공공사업관계비	59,789	69,099	9,310	15.6
경제협력비	5,089	5,021	△68	△1.3
중소기업대책비	1,771	1,790	19	1.1
에너지대책비	9,186	9,760	574	6.2
식품안정공급관계비	9,924	9,823	△101	△1.0
기타 경비	61,888	67,856	5,968	9.6
예비비	3,500	5,000	1,500	42.9
지방교부세교부금	155,150	159,850	4,701	3.0
합계 ³⁾	977,128	1,014,564	37,43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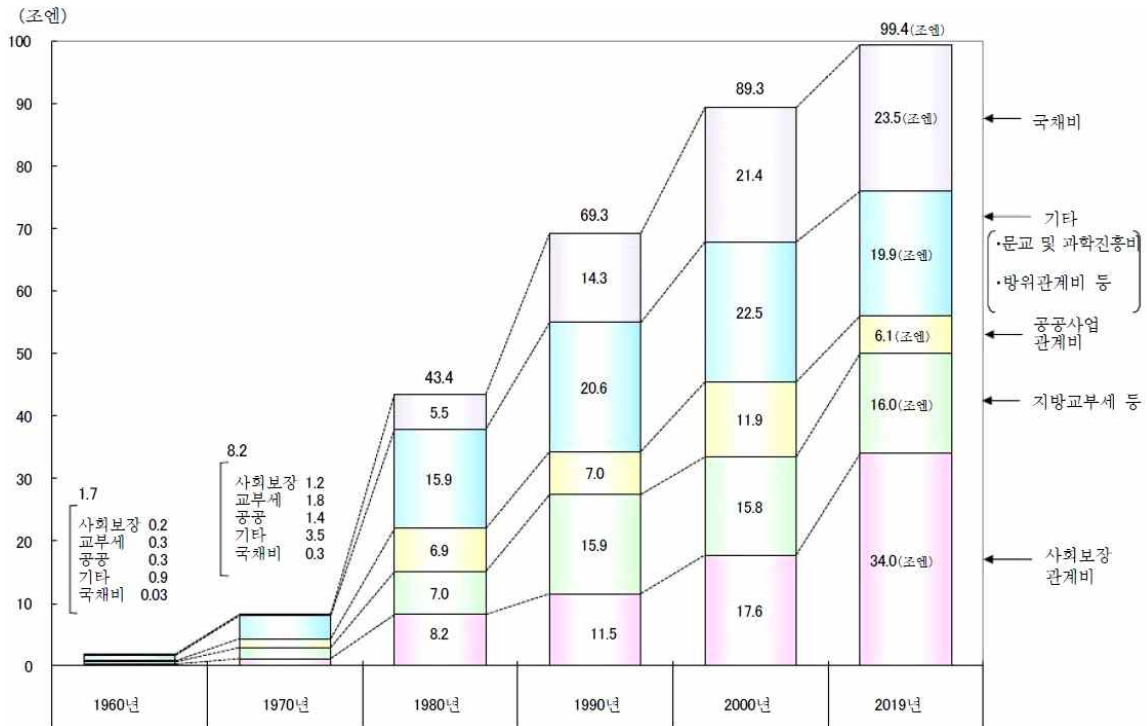
주: 1)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과의 비교를 위해 재조합하였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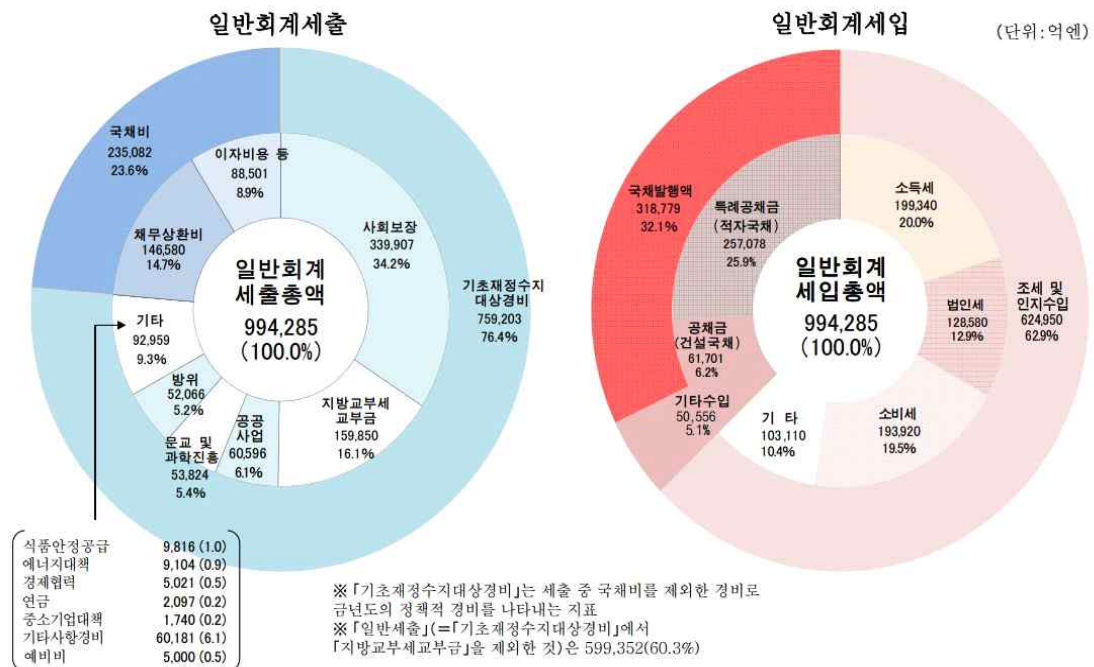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그림 2]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주: 2000년까지는 결산, 2019년은 예산안이며, 2019년은 임시특별조치에 의한 수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그림 3]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임시특별조치 제외)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참고 2> FY2018 1차 추경예산

- 일본정부는 건설국채 추가발행 등을 재원으로, 재해관련 대책을 포함한 9,356 억엔 규모의 추가세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2018.10.15.)⁹⁾
- (재해복구·부흥) 2018년 7월 호우(豪雨)관련 대책 5,034억엔,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관련 대책 1,188억엔, 태풍 제 21호, 오사카 북부 지진관련 대책 1,053억엔 등 총 7,275억엔 편성
 - (학교 긴급 중점 안전 확보 대책) 열사병 등 열중증 대책으로 에어컨 설치 822억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관련 대책 259억엔 등 총 1,081억엔 편성
 - (추가 예비비) 향후 재해대책 등을 감안한 예비비 1,000억엔 편성

<FY2018 일반회계 추경예산(1차) 프레임>

(단위 : 억엔)

세 출		세 입	
1. 재해복구·부흥	7,275	1. 공채금(건설국채)	6,950
(1) 2018년 7월 호우(豪雨)관련 대책	5,034	2. 세외수입	45
(2)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관련 대책	1,188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2,364
(3) 태풍 제 21호, 오사카 북부 지진관련 대책	1,053		
2. 학교 긴급 중점 안전 확보 대책	1,081		
(1) 열사병 등 열중증 대책으로 에어컨 설치	822		
(2)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관련 대책	259		
3. 추가 예비비	1,000		
합 계	9,356	합 계	9,356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 (第1号) フレーム」, 2018.10.15.

9) 재무성, 「平成30年度補正予算 (第1号)」, 2018.10.15.

<참고 3> FY2018 2차 추경예산

- 일본정부는 10월 1차 추경예산 발표에 이어 12월, 세수 및 건설국채 추가발행을 재원으로, 2.7조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2018.12.21.)¹⁰⁾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하천·제방·도로 방재 및 감재에 6,183억엔, 학교시설 내진화에 611억엔, 재해시 경찰용 기자재·통신기반 정비에 545억엔 등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을 즉시 착수하는 데 1조 723억엔 편성
 - (TPP¹¹⁾ 조기 발효 대응) 농지 대(大)구획화에 902억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400억엔 등 TPP 협정 조기 발효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강화 대책으로 총 3,256억엔 편성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IT도입 지속화 보조금 1,100억엔, 사업승계지원 50억엔 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에 총 2,068억엔 편성
 - (기타 긴급한 과제 대응)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정책에 7,512억엔, 재해 복구에 2,136억엔, 기타비용 명목으로 4,656억엔 등 총 1조 4,304억엔 편성
 - 그 밖에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전입으로 4,547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5,108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세출 총액의 일부(1조 2,909억엔)를 기본경비 감액분으로 충당

<FY2018 일반회계 추경예산(2차) 프레임>

(단위 : 억엔)

세 출		세 입	
1.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10,723	1. 세수	8,490
2. TPP협정 조기 발효 대응	3,256	2. 세외수입	1,393
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2,068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7,131
4.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14,304	4. 공채금	10,082
5.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전입	4,547	(1) 건설국채 증액	13,082
6. 지방교부세교부금	5,108	(2) 특례공채 감액	△3,000
7. 기존경비 감액	-12,909		
합 계	27,097	합 계	27,097

주: 세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 (第2号) フレーム」, 2018.12.21.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추경예산으로 조치해 오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¹²⁾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 및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가속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
 - 지역핵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산학관 연계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지원, 지역핵심기업의 신사업 전개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에 158.6억엔
 - 데이터 정보 공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 등 모노즈쿠리·상업·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에 50억엔
 - 소규모 사업자에게 상공회·상공회의소가 동반자적 경영지도 서비스 지원, 해당 경영지도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 일본정책금융공고(JFC)¹³⁾의 무담보·무보증저리 융자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자금 융자사업에 42.5억엔 등
- (에너지·환경) 전파이용요금 인상분(+130억엔)을 활용하여, 2020년 5G 실현을 시작으로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 고도무선시스템을 지원하는 전파 이용기반 정비, 전파의 유효활용을 위한 이용상황조사 및 주파수공용기술의 정립 등을 실시하는 데 747억엔 투입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실증 중점화 도모, 수소사회 실현을 향한 수소스테이션 정비 등을 추진에 100억엔 투입

10)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 (第2号)」, 2018.12.21.

1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12)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품질 제품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3)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 세계적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국내 재활용 체제 정비 등을 추진(70억엔)
- (관광) 방일 외국인여행자수 2020년 4,000만명 달성을 위해 영구적 재원인 국제관광여객세수(+440억엔)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을 확충
 - 얼굴인증게이트를 이용한 출입국수속의 고도화, 무료 와이파이와 다언어안내 등 지원체제 정비, 문화재나 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충 등을 가속화하는 데 총 500억엔 투입
- (농림수산) '2019년 수출 1조엔' 목표의 확실한 달성을 위해 수출 프로모션 강화, 수출 환경 정비 등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지원
 -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조사 충실, 고성능 어선 도입 등 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2018년도 추경예산 포함 3,045억엔)
- (교육·과학기술) 연구력 향상을 위해 미래의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젊은 학자들에 게 과학연구비를 대폭 배분(86억엔 증가, 2,372억엔)
 - ⊕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에 대해 대부분을 전년대와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 배분해 오던 구조에서 1,000억엔¹⁴⁾만큼을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
 - 또한 외국인재의 수입과 공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원적 상담창구 설치를 지원, 충실한 일본어 교육 등 환경 정비를 추진

나. 안전·재해 예방

- (방위)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을 포함 영역 횡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중기방위관계비는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근거로 +1.1%의 성장을 확보

14) 이 중 700억엔은 논문의 질 향상성과에 관한 공통 지표로 상대 평가하여 배분

- 우주상황모니터링(SSA) 시스템 정비(260억엔), X밴드 국방통신 위성 정비(356억엔), 사이버 정보 수집 장치 정비(36억엔), F-15 전투기 전자전 능력 향상(108억엔) 등
- (경찰·해상보안) 「해상보안체제강화에 관한 방침」에 의거, 2018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센카쿠(尖閣) 대응 대형 순시선을 중심으로 체제 강화를 지속(2,153억엔)
 - 치안 확보와 테러 미연 방지를 위한 기자재 정비 등 경비 체제 강화(213억엔 증가, 372억엔)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따라 긴급 대책 160항목을 2020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¹⁵⁾
 - 하천 제방강화, 토사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정비, 도로비탈면 성토 작업 실시, 재해에 따른 위험지도 작성 등 하천, 사방, 도로 등의 방재·감재 대책 시행(7,153억엔)
 - 저수지 보수·보강이나 통폐합, 치산 시설 설치, 어항시설 보강, 저수지 붕괴 시 침수예상지역 구역도 작성 등 저수지·치산(治山)시설·숲·어항 등에 대한 방재·감재 대책(1,207억엔)
 - 학교 시설 방재·감재, 지진해일관측망에 관한 인프라 긴급 대책 시행(1,518억엔)
 - 자위대의 방재관계기자재에 관한 긴급 대책¹⁶⁾(391억엔), 자위대의 시설에 대한 긴급 대책(117억엔)¹⁷⁾ 시행 등

다. 지역 발전·창생

□ 공공사업

15) 2018년도 2차 추경예산과 2019년도, 2020년도 임시특별조치분을 활용하여 3개년 간 총 7조엔 투입, 이 중 2019년도 임시특별조치분은 1조 3,475억엔임

16) 재해 시 구호 활동에 필요한 노후화된 기자재 결함 정비 등

17) 자위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정비 등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총 6조 596억엔)하여, 이를 지방공공단체에 계획적·집중적으로 지원해 개별보조화 및 노후화대책 마련과,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

□ 지방창생

- 지방의 자주적이고 선구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1,000억엔)과, 첨단과학 및 관광·농업 등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후원하는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22.5억엔) 등으로 지방창생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 부흥

- 부흥 단계에 따라 생업의 재개 등 세심한 지원과 함께 ,부흥거점정비 등을 통한 후쿠시마의 부흥에 주력

라. 재정건전화

□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중점화와 효율화를 달성

- 방위력정비의 효율화 및 합리화
 - 방위장비품 취득 전반에 걸쳐 장기 계약을 활용하고, 민간의 생산품(民生品)을 사용, 원가 조사 등 장비 조달의 최적화를 도모하여 4,159억엔의 효율화·합리화 효과를 실현
- 방재·감재분야에서 공공사업의 개별보조화
 - 방재·감재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던 것을 개별 보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전환(1,500억엔)
- 농지의 집적·집약화 추진
 - 농지 집적·집약화 협력금을 채권자의 농지를 집약화하기 위한 협력금에서 채무자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금에 중점화 함(168억엔)

○ 교원 배당구조의 재검토

- 영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원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가진 비율을 지표로 하는, 영어전문지도를 위한 교원배당구조를 도입

□ 사회보장관계비를 '고령화로 인한 증가분의 수준으로 유지' 한다는 「신경제·재정 재생계획」 방침을 꾸준히 달성

- 2019년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관계비의 (자연) 증가분이 4,800억엔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경제·재정재생계획」 방침을 꾸준히 달성하여 전년대비 사회보장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4,768억엔으로 억제
- 시세의 동향을 반영한 약가 개정(-503억엔), 개호납부금의 총보수비율 도입 등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807억엔)

□ (지방재정건전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지방세수 달성 결과, 대상재원의 절반이 부족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을 대폭(7,000억 엔) 감축

- 지방의 일반재정총액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한편, 유아교육무상화의 첫 해 경비 2,349억엔 전액을 국가가 부담

<참고 4> 2018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개혁공정표

□ (개요) 2018 개혁공정표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기간(2019~2025년)의 첫 해로서, 개혁 방향성을 검토하고 실시시기 등을 명확히 함¹⁸⁾

○ 사회보장분야

- 지역의료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도부현지사의 권한 방식에 대해 검토
- 보험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통조정교부금 배분, 가입자의 성별·연령에 따라 조정한 표준의료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논의, 개호(간병)조정교부금도 보험자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법정외이월금 해소기한 및 해소수단을 담은 계획을 수립·공표(가시화), 가감산(加減算) 쌍방향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
- 급부와 부담 재검토로서, 바람직한 후기고령자의 창구부담 방식과 의료·개호의 '현역동등소득'의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결정방식에 대해 검토함
- 기존 「재생계획」의 44개 전체 항목도 착실하게 추진

○ 사회자본 정비 등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 따라 자본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개정 PFI법으로 설립된 원스톱 창구 제도 활용,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공공단체까지 PPP/PFI의 도입을 추진
-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의 입지적정화계획에 더하여 지역대중교통망형성계획의 작성 및 실시를,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¹⁹⁾ 및 대중교통체계 재검토와 함께 추진

○ 지방행정 및 재정 개혁

- 수도·하수도 광역화 추진을 포함한 지속경영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고, 선진 사례 공표 및 다양한 PPP/PFI 도입을 촉진

18)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 지방재정의 전면적 투명화(가시화)를 추진하여,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을 공표하고 결산정보 투명화를 추진

○ 문교·과학기술

- 성과에 관한 객관적·공통지표²⁰⁾를 통해 운영비교부금 배분(배분 대상금액은 700억엔, 중점지원평가까지 합치면 총 1,000억엔)
- 교육정책에 관한 실증연구의 진전 등을 근거로 한 교직원 정수의 중기 예측치 책정, 외부인재의 활용 등과 관련 학교에서 활동 방식 개혁을 추진, 원격교육 추진에 의한 교육의 정보화
- 혁신(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세출 효율화를 추구하고, 증거(에비던스) 구축과 비용 효과의 투명화, 근거기반정책입안(Evidence Based Policy Making; EBPM)화를 추진

19) 마치즈쿠리(일본의 마을만들기):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도시나 마을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

20) 지표는 2019년 여름경까지 고려하여 2020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함